

광주 '워라밸' 특·광역시 중 최하 수준

대구 다음 낮아...전남은 충남·북 제외 최하위 고용부 '2017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발표

광주·전남지역 지역민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수준이 전국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과로사회'를 벗어나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 사업장',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 돌봄교실 이용률' 등을 종합해 산출한 '제도' 부문 점수로 7.6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호남지방통계청의 '2017년 육아휴직 사용률'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광주지역 남성 비중은 7.0%로 전국 평균(13.4%)에 훨씬 못 미쳤다. 서울은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장 비율이 높은 점 등이 남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등에 반영되면서 제도 영역 점수가 14.8점에 달하는 등 월등히 높았다. 노동부는 서울의 총 근로시간(월 166.3시간)과 초과근로시간(월 5.2시간)의 경우 광역·시·도 중 가장 짧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20.5%)도 높았다고 밝혔다. 광주는 또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시간 등을 반영해 산출한 생활(30.1점 만점) 분야 점수도 14.0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남도 비슷해 일·생활 균형 지수가 35.2점으로 충남·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은 '일·생활 균형 조례'나 '전담인력' 유무 등으로 산출한 '지자체 관심도'(22.8점 만점) 점수가 4.3점으로 전국 평균(6.0점)에 못 미쳤고 지역별로도 서울을 제외한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됐다.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수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실태와 관심도 제고, 지역 맞춤형 개선 등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수로 지역 간 일·생활 균형정도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7.1점이다. 특·광역시 중에는 서울(43.1점)이 가장 높았고 부산(39.5점), 대전(38.4점), 울산(38.2점), 대구(36.5점)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일·생활·제도·지자체 관심도 등으로 나눈 4개 평가 영역 중 제도(25.0점 만점)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는 '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 사업장',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 돌봄교실 이용률' 등을 종합해 산출한 '제도' 부문 점수로 7.6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호남지방통계청의 '2017년 육아휴직 사용률'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광주지역 남성 비중은 7.0%로 전국 평균(13.4%)에 훨씬 못 미쳤다. 서울은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장 비율이 높은 점 등이 남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등에 반영되면서 제도 영역 점수가 14.8점에 달하는 등 월등히 높았다. 노동부는 서울의 총 근로시간(월 166.3시간)과 초과근로시간(월 5.2시간)의 경우 광역·시·도 중 가장 짧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20.5%)도 높았다고 밝혔다. 광주는 또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시간 등을 반영해 산출한 생활(30.1점 만점) 분야 점수도 14.0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남도 비슷해 일·생활 균형 지수가 35.2점으로 충남·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은 '일·생활 균형 조례'나 '전담인력' 유무 등으로 산출한 '지자체 관심도'(22.8점 만점) 점수가 4.3점으로 전국 평균(6.0점)에 못 미쳤고 지역별로도 서울을 제외한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됐다.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수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실태와 관심도 제고, 지역 맞춤형 개선 등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수로 지역 간 일·생활 균형정도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총점 (100)	일 (22.1)	생활 (30.1)	제도 (25.0)	지자체 관심도 (22.8)
전국	37.1	7.9	14.5	8.7	6.0
서울	43.1	9.2	15.0	14.8	4.2
부산	39.5	8.1	15.3	9.3	6.9
대구	36.5	7.7	14.1	7.8	6.9
인천	36.1	8.0	14.9	7.7	5.5
광주	36.1	8.1	14.0	7.6	6.4
대전	38.4	8.2	15.1	9.6	5.5
울산	38.2	8.1	14.9	8.3	6.9
세종	36.2	7.7	14.1	9.1	5.3
경기	37.2	8.2	13.9	8.2	7.0
강원	36.4	8.5	13.9	8.0	6.1
충북	34.8	7.1	13.7	8.7	5.3
충남	34.8	7.3	14.0	8.3	5.2
전북	37.4	7.4	15.2	8.2	6.6
전남	35.2	7.6	15.0	8.3	4.3
경북	36.6	7.3	13.8	7.7	7.7
경남	37.7	7.6	15.5	8.3	6.3
제주	37.1	8.7	14.2	8.5	5.6

남구 구급고 선정 국민은행, 광주은행에 OCR 시스템 대항 요청 구민 세정업무 혼란 불편 우려

광주지역 자치단체 금고 선정 후유증이 심각하다. 광주구 구급고 운영계약이 중단된데 이어 최근 남구 구급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이 광주은행에게 OCR(Optical Character Reader·광학식문자판독)시스템 업무 대항 요청을 해 세정업무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남구는 지난 10월 25일 구급고를 기존 광주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은행은 심의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법원에 금고약정 이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남구는 절차대로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제안서에 없는 국민은행의 추가 협력사업계획이 반영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3일 남구와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7일 남구 담당 공무원과 국민은행 관계자가 광주은행을 찾아와 광주은행이 OCR시스템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말 남구 구급고 업무를 중단 할 방침이어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 관련 고지서 발급과 납부정보에 관한 자금 정산 등 세정 업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입처리업무는 자치단체의 주 금고은행(1급고)이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은행은 주급고(1급고) 수행경험이 없어 세입처리업무 전산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입처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으로는 OCR센터에서 운영중인 OCR자금정산시스템과 가상계좌시스템, 과오납환급시스템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구민들이 세금을 납부했다라도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남구 세정관련 전산에 통지가 안돼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 세정업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구급고 심의 전 설명회 때도 OCR시스템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은행이 잘 준비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구급고를 유지 한 후 이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출연금 등 막대한 자금력으로 구급고에 선정됐음을 자인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3년간 남구 구급고 업무를 중단 할 방침이어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 관련 고지서 발급과 납부정보에 관한 자금 정산 등 세정 업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금고 업무는 구민들이 은행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집계하고 해당 회계별로 입금해주는 세입처리 업무와 남구 구급관련 사업비, 경비 등을 지출하는 세출업무, 구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자금운용업무 등이 주 업무다. 남구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OCR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간도 충분하다"며 "광주은행 도움 없이도 국민은행이 OCR시스템을 충분히 운영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국민은행이 OCR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간도 충분하다"며 "광주은행 도움 없이도 국민은행이 OCR시스템을 충분히 운영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중소 광산업체 인력·기술 지원

광산업 인력 연 500명 배출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광산업체들의 기술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광기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고가의 해외 정보자료를 사들여 광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23일 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진흥회는 광산업계 종사자와 연구소 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5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교육생들에게는 최신 광산업 트렌드와 교육생 수요를 고려해 LED 및 OLED 기술·시장동향, 실리콘 포토닉스, 양자 광통신 기술, 자율주행 기술 및 시장 동향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산업계 임직원과 기관 연구인력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통신용 반도체 광원 개발

원리와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매년 교육생이 1.5배씩 늘어나는 등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진흥회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3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치	
9 14 17 33 36 38	2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813,733,050	5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46,736,925	68
3 5개 숫자일치	1,431,582	2,220
4 4개 숫자일치	50,000	107,897
5 3개 숫자일치	5,000	1,777,501

내년 광주·전남 2만216가구 분양 공급

부동산114 조사

내년 광주·전남지역에 2만216가구가 분양 공급된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 청약제도 변화 등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에서 얼마나 분양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부동산114가 조사한 '2019년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르면 내년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1만5951가구, 전남에는 42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적

으로는 365개 사업장에서 모두 38만6741가구의 분양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분양 예정 물량은 올해(7051가구)에 견줘 2786가구 줄어드는 반면, 광주에서는 올 분양물량(6680가)보다 9271가구가 많아지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22만 2729가구를 분양할 올해와 비교하면 73.6% 증가했다.

부동산 114는 9·13 부동산 대책과 청약제도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 등으로 건설사들이 원래 계획했던 분양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광주에서는 계림동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라 171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남구 월산동 반도유보라 아파트 889가구가 분양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죽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신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